"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1055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3월 10일 화요일(음력 1월 22일)

풍력개발 '공유화 기금' 위법 논란

현행 고시·조례, 기업 측에 이익 환원 계획 의무 제출
법률상 '강제 출연' 금지… 용역진 "사실상 강제 기부"
도 "기부금→협력금 등 대체"… 제도 정비 계획 피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풍력발전사업 이익공유제의 핵심인 공유화 기금이 그동안 위법하게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 의뢰로 제주 풍력발전 조례 정비 방안을 연구한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 29일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풍력 이익공유제 시행 방식에 "법적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기부금을 내용으로 하는 이익 공유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익공유제의 핵심은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와 나눠 갖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은 도지사에게 풍력 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규정해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 법률을 토대로 지난 2013년 풍력 조례를 개정해 '이익공유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16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이하 기금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식과 쓰임새를 규정했다.

풍력개발 이익 공유 재원은 기금 조례에 따라 도 출연금과 에너지공사 이익 배당금,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도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된 것은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이다. 도는 고시를 통해 풍력발전단지 응모 기업에게 '개발 이익의 몇%를 기부금으로 낸다'는 식의 공유화 계획을 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풍력 조례는 풍력발전지구 연장 여부를 심의할 때도 이런 계획을 제출 받도록 의무화했다.

용역진은 이같은 기금 조성 방식이 사실상 강제 기부에 해당해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부금품법은 '모집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자치단체에 대해선 기부금품을 단순 모집해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기부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이익공유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한 뒤 이 계획에 따라 공유화 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강제 기부로 볼 수 있다"며 "또 도는 단순 기부금품 모집자 역할을 떠나 공유화 기금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쓰고 있어 모집 주체 제한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추자해상풍력 공모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공기업인 중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추자해상풍력 공모에 단독 응모했지만 2차 평가 때 필요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해당 공모는 지난달 최종 유찰됐다. 도는 현행 개발이익 공유 방식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이미 지난해 말 받았지만 당시 공모를 진행한 에너지공사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

강 교수는 "추자풍력 사례에 봤듯이 강제 기부 방식의 이익 공유화 계획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풍력자원 이익공유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나서 '기부금'으로 규정된 조문을 협력금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위법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또 관계부서와 협의해 제주특별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하도리 별방진에서 즐기는 봄 9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별방진을 찾은 관광객들이 성곽 위와 만발한 유채꽃밭 주변을 걸으며 성큼 다가온 제주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中 사기조직단 범행 피해 눈덩이… 4면 / 중동발 악재에 등유 가격도 폭등… 6면

도내 학교 친환경에너지 전환 주목

도교육청, 5월까지 한림항공우주고에 ESS 설치
전국 최대 용량… "도내 전 학교로 확대" 검토

제주지역 학교에 첫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 쓸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데, 쉽게 말해 '전기 저금통'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에 600kWh(킬로와트시)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도내 학교에 에너지저장장치가 갖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최대 용량이다. 앞서 서울, 충북, 세종, 울산, 광주 등 전국 5개 시·도 학교에도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된 사례가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최대 용량은 480kWh다.

도교육청은 에너지저장장치와 함께 156kW(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도 추가로 설치한다. 이로써 한림항공우주고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 기존 15kW에서 171kW로 늘어난다. 에너지저장장치와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9억5000만원이다.

한림항공우주고에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는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화재 감시, 차단 장치 등 안전시설도 갖춘다.

이같은 시설이 설치되면 학교 전기 사용량과 저장 상태가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쓰다 남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저장해 뒀다가 수업 시간처럼 전기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활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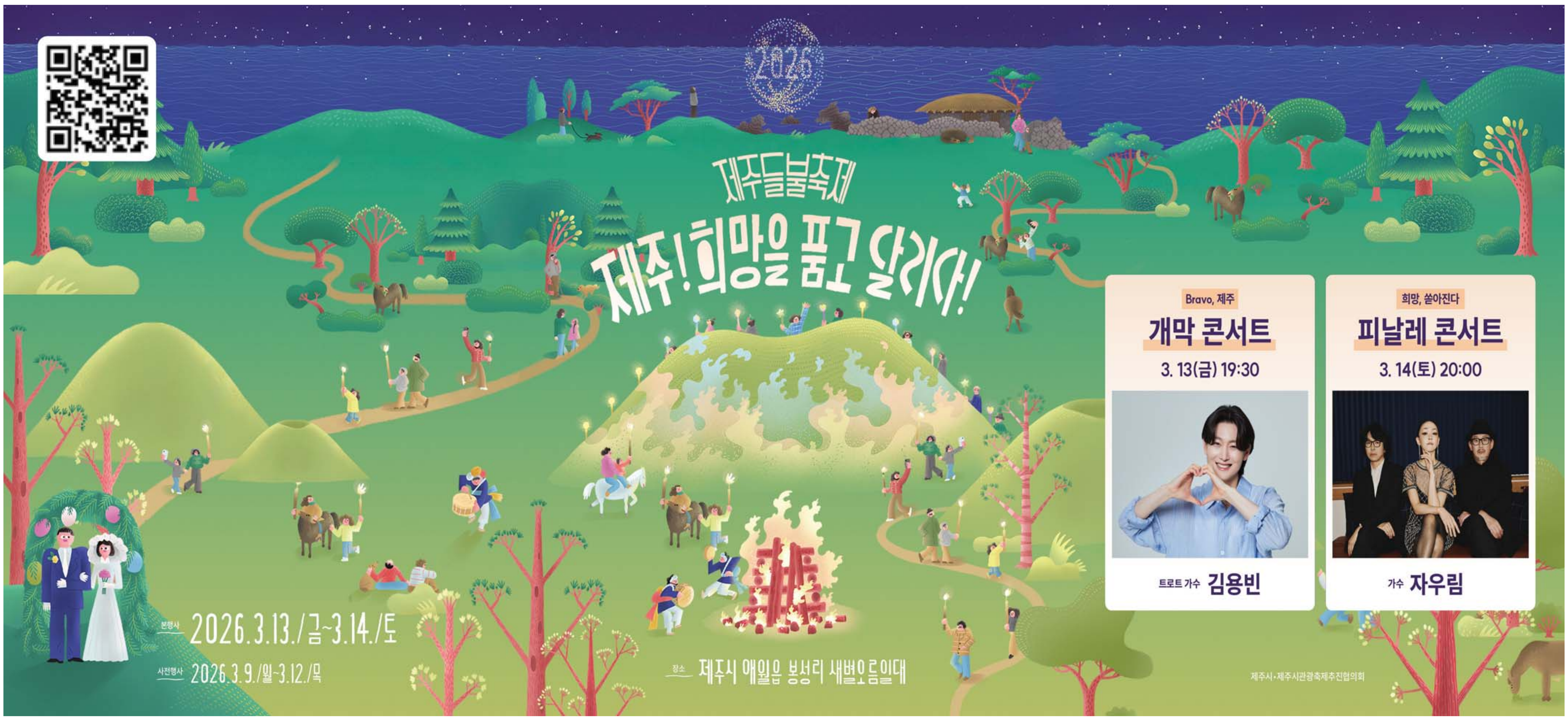
도교육청은 오는 5월말까지 시설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한림항공우주고에서 하루 동안 쓰이는 전기(지난해 기준 1일 2900kWh)의 약 37%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한림항공우주고를 '친환경 에너지 학교'의 모델로 삼고 도내 학교에 에너지저장장치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를 통해 효율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한림항공우주고의 경우 시설 가동일을 기점으로 20년 뒤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도교육청의 관측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림항공우주고의 시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 (다른 학교로) 확대할 것"이라며 "설치 여건 등도 고려해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도,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4월 10일까지 ▷일반(판매희망가 10만원 이하) ▷프리미엄(10만원 초과) ▷학생 아이디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전은 전문가 서류심사와 사전 컨설팅, 대중심사, 전문가 실물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일반 7점, 프리미엄 1점, 학생 아이디어 2점 등 총 10개 작품을 최종 선정한다. 대회 상금은 대상 7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대중인기상 50만원, 입선 25만원이다. 문의 741-8736, 8744. 오소범기자